

□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시작합니다.

[① 도입]

□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
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
「공급망 3법」을 도입했습니다.

-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하여
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
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합니다.

□ 앞으로 공급망위원회는
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
항공모함의 조타수(操舵手)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.

[② 공급망안정화 추진전략]

□ 먼저 핵심 품목의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.

-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
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합니다.
- 그 중 반도체·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
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
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키겠습니다.
-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(선도사업자)에 대해서는
금년 중 5조원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,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□ 다음으로,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.

-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
-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*하여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* 현재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을 100% 취득시만 공제 허용

- 핵심품목의 원자재·중간재 확보, R&D,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*하고

* 과기, 산업, 해수, 국토, 복지, 방사청 등 협업으로 완결된 공급망 구축방안 마련

-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*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* 방안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- 아울러 요소·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.

□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-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&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

-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
신성장 · 원천기술 · 국가전략기술에
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.
- 또한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
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,

IPEF 공급망 협정, MSP*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,
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(EDCF 등)를 통한 협력사업을
발굴하겠습니다.

* IPEF(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), MSP(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)

[③ 마무리 말씀]

-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
담긴 「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」을 하반기에 수립합니다.
-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, 식량, 물류 등
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